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 원 구성·당 쇄신 시험대

“계과갈등 경계하고 민심만 볼 것”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대응과
야당 몫 상임위원장 확보 ‘과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정점식의 원(경남 통영고성)이 선출됐다. 정 신임 원내대표 앞에는 거대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 협상과 함께 당 쇄신이라는 난제가 놓여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앞서 4선 김도읍 의원, 3선 성일종 의원과 경쟁했는데,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을 얻지 못해 김 의원과 결선 투표에 올랐다. 결선에서는 정 의원이 55표, 김 의원이 48표를 받아 정 의원이 당선됐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던진 한 표는 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만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민심뿐”이라며 “약속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마치고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로 특정인과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110명 한분 한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의원총회의 집단지성을 통해 원내 운영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원들이 최전선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내에서부터 뒷받침하겠다”며 “당면한 원 구성 협상부터 단

호하게, 철저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단 취임과 함께 여당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의 배분이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법사위원장 지리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의 체계·지구 수정을 맡는 곳으로, 법사위의 문턱에 걸릴 경우 법안이 계류될 수 있다. 거기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핵심 상임위원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부위원회 등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는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

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대한 협상도 과제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 조율은 필요하다.

특검의 경우 특검 추천권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에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정조사는 조사 범위와 특위 구성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조만간 여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규정 짓고 공세를 펴온 바 있다.

당내 문제는 더 복잡하다.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선거 패배 책임론’이 여전해서다. 당내 소장파 등은 장 대표와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도 친한(친한동훈)계에서 계속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출됐지만, 소장파의 지지를 받는 김도읍 의원과 결선까지 가는 접전이 벌어질 만큼 장 대표에 대한 거취 압력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장 대표가 자리를 지킬 경우엔 내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 대표가 사퇴할 경우, 정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여부와 차기 지도 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서울 패배 책임론 확산... 민주당 내홍 조짐

(6·3 지방선거)

선거백서 발간하고 평가위 구성 추진
정청래 대표 “당·정·청 협력 강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첫 공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민주당 공개 최고위에서 서울 패배 등을 두고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을 담을 수 있도록 내외부 인사를 절반씩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울러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을 계기로 삼겠다”며 “당·정·청 원 팀 윈 보이스를 더 강화해 일 잘하는 지방 정부와 함께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크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이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나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백서를 만드는 것과 별개로 국민과 당원은 지도부에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길 수 있었던 곳, 반드시 이겨야만 했던 곳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지도부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지선 후 민심 요동... 여야 지지율 초점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바짝 붙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38.6%, 국민의힘은 38.1%를 기록했다.

두 정당 간 격차는 0.5%포인트다.

직전 조사(5월 26~27일)에서 11.7%포인트(민주당 43.3%-국민의힘 31.6%)였던 격차가 약 2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개혁신당은 3.9%, 조국혁신당은 1.6%, 진보당은 1.0%였고, 무당층(없음-잘 모름)은 14.1%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정지지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지지율이 지난 6·3 지방선거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벨기에와 무역·투자 협력 강화 논의

李 대통령, 웨브흐 총리와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벨기에와의 첫 정상 간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뤼셀 총리관에서 웨브흐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국 간 무역 증진 및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 내 제2의 항구인 앤트워프항이 소재한 물류의 중심지다. 또 화학·바이오 클러스터 산업이 발달한 나라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로’ 확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대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브뤼셀 총리관에서 바르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통령은 한-벨기에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진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예진 기자

李 “재외공관, 교민지원 플랫폼 역할 해야”

>> 1면 ‘李 대통령, 8박10일’서 계속

이어 “본국이 잘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야말로 윈 조를 받아서 힘겹게 살아가던 가난한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좀 앞서더니, 이젠 세계 문화의 중심국가처럼 느껴지지 않나.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좀 더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전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저력을 믿는다. 벨기에에 자리 잡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민간 외교관들 아니겠나. 앞으로도 여러분의 역할은 정말로 크고 기대가 많이 된다”고 했다.

또 “대통령과 벨기에 교민 간담회가 역대 처음이라고 해서 놀랐다”며 “재외국민

과 동포를 합한 교민 수가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결코 적은 건 아니다. 또 벨기에가 6·25에 참전해 106명이 전사했다고 한다. 국가 규모 대비 많은 수의 전사자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외공관을 문화산업 진출 이라든지 또는 재외교민들의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한 후 재외공관장들에게 재외국민들, 동포들과의 면담도 자주하고 접촉도 늘려서 과연 그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지 다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1200건인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한 10배 이상 나와야 정상이다. 요구 사항이 제로가 될 때까지 다 해치우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 기자